

# 범야권 원탁회의 오늘 출범...“내란종식·민주헌정 수호”

### 민주·혁신·진보 등 야 5당 참여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추진 민생경제 살리기 공동실천 나서 조기대선 염두 연대 시동 해석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출범한다.

조기대선 정국을 염두에 두고 범야권이 정권 교체를 위한 세 결집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18일 원탁회의 출범 발표문을 통해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

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원탁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표면화된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며 "아직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을 맨몸으로 막기 위해 광장을 달군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권력기관개혁 등 개혁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공동실행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내란 세력이 내팽개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동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신당은 범야권 실무협의 과정에서 원탁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대변인은 "원탁회의가 출범한 뒤 개혁신당이 뜻을 같이, 함께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열어두고 참여를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원탁회의'는 야 5당의 연대를 시작으로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야권의 원탁회의 구성 논의는 지난 2일 조국혁신당이 처음 제안했고, 다음 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됐

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하면서 출범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당초 원탁회의에는 개혁신당까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일단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야당만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야 5당의 원탁회의 구성을 놓고 사실상 조기 대선용 야권 연대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질 경우, 박빙의 승부가 예

상되는 상황에서 원탁회의가 내란 종식과 사회 개혁을 고리로 전 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원탁회의는 앞으로 구체적 의제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될 각 분과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뿔뿔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시민사회 목소리까지 합쳐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연합 같은 조직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안도걸 "35조 추경안, 성장률 최대 0.47%p 올릴 것"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은 18일 "우리 당이 제시한 34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 모형(BOK2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지함으로써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 분기로 지연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의 규모나 대상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을 포기한 행태"라며 질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보장' 법안 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18일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철도·지하철·여객선·도선을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 여건 개선은 갈수록 더딘 상황이다.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년 164대



에서 올해(지난 1월 기준)는 150대로 14대나 감소했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섬 주민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안평환 시의원 "광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연령 낮춰"

운전면허 가진 반납 시 혜택을 받는 광주 고령 운전자 기준이 완화돼 대상이 확대된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반납 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 안전 교육과 홍보,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배포 등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정성현 기자

## 최지현 시의원 "광주 도축검사관 인력 부족"

광주시의 도축검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축량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검사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식육의 안전성 확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최지현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도축검사관의 법정 필요 인원은 8명이지만 정원은 5명에 불과하고 실제 근무 인원은 4명뿐이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법



정 필요 검사관 인원이 1일 평균 도축두수 대비 매년 2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도축검사관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다시도 사례를 참고해 공수의 활용 등 검사관 인력 충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8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반도체특별법 합의 무산 놓고 '네티트 공방'

### 권성동 "이재명 친기업·성장은 거짓말" 이재명 "국힘 몽니로 국가경쟁력 발목"

여야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합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앞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으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며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개발은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근로제)에 묶여 있다"며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건을 묵살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가 불과 2주 만에 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법 소위 통과 무산은 "주 52시간(근로제)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이냐.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인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서울=김선욱 기자